

2019년 서울시 9급 공채 1차 사회 문제와 해설 (2019.02.23.)

사회문화 1~6번(6문제)
법과정치 7~8, 10~13, 17번(7문제)
경제 9, 14~16, 18~20번(7문제)

1. <보기>는 자료수집방법 A~D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질문지법, 면접법, 실험법, 참여관찰법 중 하나이다.)

<보기>

구분		조작적 정의의 과정을 거치는 연구방법에서 주로 쓰는가?	
		예	아니오
(가)	예	A	B
	아니오	C	D

- ① (가)가 '조사대상자와 연구자 간 신뢰관계가 중요한가?' 라면, B는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의 효과를 관찰하는 자료수집방법이다.
- ② (가)가 '연구자가 현상이 실제로 발생한 현지에 가서 연구해야 하는가?'라면 A는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계량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자료수집방법이다.
- ③ (가)가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가?'라면 B는 면대면 대화를 통해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자료 수집방법이다.
- ④ (가)가 '언어적 상호 작용에 의한 자료 수집이 필수적인가?' 라면 D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연구대상의 행동을 관찰하는 자료수집방법이다.

[정답] ④

[출제단원] 사회·문화 I.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출제영역] 자료 수집 방법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조작적 정의'의 과정을 거치는 연구는 실증적 연구방법입니다. 따라서 '조작적 정의의 과정을 거치는 연구방법에 주로 쓰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한 A, C는 실증적 연구방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인 질문지법과 실험법 중 하나이고, '아니오'라고 답한 B, D는 해석적 연구 방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인 면접법과 참여관찰법 중 하나입니다.

- ① (X) 앞서 설명한 것처럼 B는 면접법과 참여관찰법 중 하나입니다.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의 효과를 관찰하는 자료수집방법'은 실험법이기에 때문에 B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X) (가)가 '연구자가 현상이 실제로 발생한 현지에 가서 연구해야 하는가?'라면 이에 '예'라고 답한 A는 참여관찰법입니다. 그러나 A는 실험법이나 질문지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틀린 선지입니다. 참고로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계량화 된 자료를 수집하는 자료 수집 방법은 질문지법입니다.
- ③ (X) (가)가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가?'라면 이에 '예'라고 답한 B는 문헌연구법입니다. 그러나 단서에 제시된 자료 수집 방법에는 문헌연구법이 없습니다.
- ④ (O) 참여관찰법과 면접법 중에서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인 것은

면접법입니다. 따라서 (가)가 '언어적 상호 작용에 의한 자료 수집이 필수적인가?' 라면 이에 '예'라고 답한 B는 면접법, '아니오'라고 답한 D는 참여관찰법입니다. 참여관찰법(D)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연구대상의 행동을 관찰하는 자료수집방법입니다.

2. <보기>의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

㉠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며, 현재는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 연금은 가입 기간, 그러니까 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일 때 60세 이상부터 평생 받게 되는 급여입니다. 65세 이하는 소득 활동 정도에 따라 노령 연금 혹은 조기노령연금 지급액이 바뀌는데요, 활동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는 55세 이상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며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
- ② ㉡은 가입자의 비용 부담 능력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진다.
- ③ ㉢은 ㉡과 달리 사전 예방적인 성격을 가지며 선별적 복지에 해당한다.
- ④ ㉣은 ㉢과 달리 사후 처방적인 성격이 강하고 재원을 부담하는 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정답] ②
[출제단원] 사회·문화 IV. 사회 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사회 보장 제도의 종류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기초노령연금(㉠)은 공공부조,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사례입니다.
- ① (X) 기초노령연금(㉠)은 공공부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수혜 대상이 소득 하위 70%에 한정되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 ② (O) 국민연금(㉢)은 사회 보험입니다. 사회 보험료는 부담 능력에 비례해서 책정됩니다.
 - ③ (X) 공공부조(㉠)는 사후 처방적 사회 보장제도이고, 사회보험(㉢)은 사전예방적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의 수혜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한정되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연금(㉢)과 달리 선별적 복지에 해당한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 ④ (X) 사회 보험(㉢)은 사전 예방적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또한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원을 부담하는 자와 수혜자와 원칙적으로 일치합니다.

3. 일탈행위에 관한 <보기 1>의 이론에서 제시하는 해결 방안을 <보기 2>에서 가장 옳게 고른 것은?

————— <보기 1> —————

성인들이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문제아로 규정하고,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보기 2> —————

ㄱ. 사회적 규범의 통제력 회복
ㄴ. 정상적인 집단과의 교류 추진
ㄷ. 타인에 대한 신중한 낙인 필요
ㄹ. 일탈자로 규정되는 과정과 일탈의 상대성을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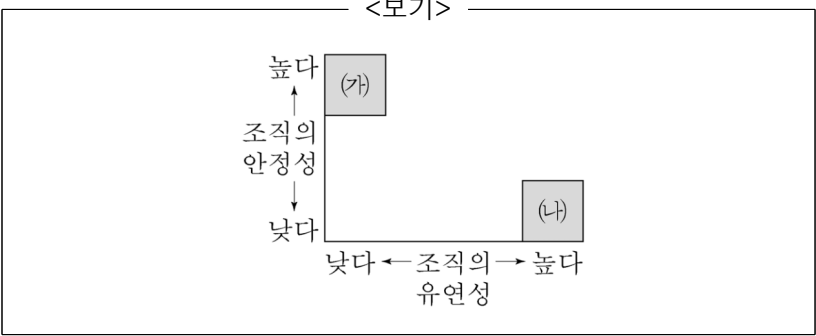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ㄹ

[정답] ④
[출제단원] 사회·문화 II.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일탈 행위론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보기1>에서 학교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나타나는 원인으로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선부른 문제아 ‘낙인’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탈행위를 설명하는 ‘낙인 이론’에 해당합니다.
- ㄱ. (X) 사회적 규범의 통제력 회복을 일탈행위의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뒤르캄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 ㄴ. (X) 정상적인 집단과의 교류 추진을 일탈행위의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차별적 교제 이론’입니다.
 - ㄷ. (O) 낙인 이론에 따르면 성급한 낙인이 심각한 2차 일탈을 유발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탈에 대한 규정을 신중하게 할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 ㄹ. (O) 낙인 이론에 따르면 일탈은 행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 속성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사회적 규정에 의해 결정되는 상대적 개념입니다. 또한 낙인 이론은 일탈을 행하는 사람 그 자체의 개인적인 특성에서 일탈 행동이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일탈자로 낙인찍고, 낙인찍힌 사람이 스스로 낙인을 내면화하여 심각한 2차 일탈을 행한다고 봅니다. 즉, 일탈자로 규정되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4. <보기>의 (가)와 (나) 해당하는 사회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효율성을 중요시 여긴다.
- ② (나)는 조직 내 지위가 권한과 책임에 따라 서열화되어 있다.
- ③ (가)는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에 적합한 사회조직이다.
- ④ (나)는 (가)보다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체계가 이루어진다.

[정답] ①
[출제단원] 사회·문화 II.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관료제와 탈관료제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조직의 안정성이 높은 (가)는 관료제, 유연성이 높은 (나)는 탈관료제 조직에 해당합니다.

- ① (O) 관료제는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 조직입니다. 다만, 사회 변동 속도가 빨라지고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비효율성을 드러내게 되어 그 대안으로 탈관료제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관료제(가)와 탈관료제(나)는 둘 다 효율성을 중요시합니다. 헛갈리기 딱 좋은 내용인데 출제자가 정확히 타겟을 잡아서 출제한 것입니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 ② (X) 조직 내 지위가 권한과 책임에 따라 서열화되어 있는 것은 관료제(가)의 특성입니다. 탈관료제(나)는 구성원간의 수평적 관계를 특징으로 합니다.
- ③ (X) 관료제(가)는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에 적합한 조직입니다.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에 적합한 조직은 탈관료제(나)입니다.
- ④ (X)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체계는 관료제(가)의 특징입니다. 탈관료제(나)는 능력에 따른 보상을 우선시 합니다.

참고) 이 문제는 (단, (가)와 (나)는 각각 관료제와 탈관료제 조직 중 하나에 해당한다.)라는 단서가 빠져있습니다. 아무래도 출제자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5.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관한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가)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할 때는 소속 정당을 봐야 해.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정당의 결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

(나) 후보자의 소속 정당보다는 후보자 개인의 능력이나 품성이 중요하지. 훌륭한 인물이 대표가 되면 정당의 발전도 가능해.

- ① (가)의 관점은 사회의 합은 개인의 합보다 크다고 본다.
- ② (나)의 관점에서는 사회는 실재하며 개인에게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본다.
- ③ (가)의 관점은 (나)의 관점과는 달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의 의식개혁에 중점을 둔다.
- ④ (나)의 관점은 (가)의 관점과 달리 사회를 생물유기체에 비유하며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한다.

[정답] ①
[출제단원] 사회·문화 II.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사회 실재론 vs 사회 명목론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가)는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정당의 결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집단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사회 실재론에 해당합니다. (나)는 훌륭한 인물이 대표가 되면 정당의 발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인이 집단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사회 명목론에 해당합니다.

- ① (O) 사회 실재론(가)은 사회는 개인의 합보다 크며, 독립적 실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봅니다.
- ② (X) 사회는 실재하며 개인에게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사회 실재론(가)의 입장입니다.
- ③ (X) 사회 실재론(가)은 사회문제 해결책으로 사회 구조와 제도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사회 명목론(나)은 개인의 의식개혁에 중점을 둡니다.
- ④ (X) 사회를 생물유기체에 비유하는 것은 사회 실재론(가)이고,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것은 사회 명목론(나)의 특징입니다.

추신, ①번 선지는 출제자가 오타 낸 것 같습니다. 원래 의도는 ‘사회는 개인의 합보다 크다고 본다’였을 겁니다. 이래야 생각할 여지라도 있는 선지가 되거든요. 개인이 아무리 커봐야 사회보다 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회’의 합이 ‘개인’의 합보다 크다고 물어보면 이게 틀린 말일 수 있겠습니까?

6. <보기>의 이론에 대해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이븐 할둔(Ibn Khaldoun)은 이슬람 문명의 흥망성쇠에 관심을 갖고 여러 나라의 흥망사를 비교 설명하면서 사회 변화나 문화 현상은 유기체의 일생처럼 성장과 쇠퇴를 되풀이한다고 주장하였다.

- ① 과거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사회 변동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데 유용하다.
- ② 문화 상대주의를 부정하고 서구 사회의 지배를 정당화한다.
- ③ 변동은 곧 진보를 의미한다고 본다.
- ④ 사회 발전은 변동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①

[출제단원] 사회·문화 VI. 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

[출제영역] 순환론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사회 변화나 문화 현상이 유기체의 일생처럼 성장과 쇠퇴를 되풀이한다고 보는 것은 사회 변동에 관한 ‘순환론’의 관점입니다.

- ① (O) 순환론은 과거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문명의 흥망성쇠를 확인하고 설명하는데 유용합니다. 다만, 앞으로의 사회 변동을 예측하고 대응하는데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 ② (X) 서구 사회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다고 비판을 받는 것은 ‘사회 진화론’입니다.
- ③ (X) 사회 변동이 곧 진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사회 진화론’입니다.
- ④ (X) 사회 발전은 변동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한다고 보는 것은 ‘사회 진화론’입니다.

7.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갑(甲)은 A주택의 소유자이다.

- 갑(甲) - 2017년 2월 15일 A주택에 대해 B은행에 3억 원 근저당을 설정함.
- 갑(甲) - 2017년 10월 2일 A주택에 대해 을(乙)과 2억 원에 전세 계약을 함.
- 을(乙) - 2017년 12월 2일 A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음.
- 갑(甲) - 2018년 1월 10일 A주택에 대해 C은행에 2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함.

- ① 을(乙)의 A주택 전입신고 기록은 등기부 등본 갑구에 기록된다.
- ② A주택 등기부 등본 을구에는 B은행과 C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 ③ A주택이 경매될 경우 을(乙)은 B은행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 ④ 갑(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면 B은행은 A주택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정답] ②

[출제단원] 법과정치 IV. 개인 생활과 법

[출제영역] 주택임대차 보호법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① (X) 등기부 등본 갑구에는 소유권 관련 사항을 기록합니다. 전입신고 여부는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 ② (O) 근저당권은 담보물권으로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에 해당합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은 등기부 을구에 기재되기 때문에 B은행과 C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도 등기부 을구에 표시됩니다.
- ③ (X) 을(乙)은 2017년 12월 2일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날부터 우선 변제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우선 변제권은 부동산 경매 시 경락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일 뿐,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따라서 을(乙)이 받은 확정일자로 인해 을(乙)보다 뒤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C은행보다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지만, 을(乙)보다 먼저 근저당권을 설정한 B은행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④ (X) B은행이 A주택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은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용익 물권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시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담보물권입니다.

8. <보기>에 제시된 헌법 조항에 나타난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66조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 ① 국민주권의 원리

② 대의제의 원리

③ 권력분립의 원리

④ 지방 자치의 원리

[정답] ④
[출제단원] 법과정치 Ⅰ. 민주 정치와 법
[출제영역]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① (O) 헌법 제1조 ②항을 통해 우리 헌법이 국민주권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O) 헌법 제41조 ①항을 통해 우리 헌법이 대의제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③ (O) 헌법 제40조, 제66조 ④항, 제101조 ①항은 각각 입법권과 행정권, 사법권의 주체가 국회, 정부, 법원으로 분리되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헌법이 권력분립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④ (X) 주어진 보기에서 지방 자치의 원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조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지방 자치의 원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9. <보기>는 우리나라의 외환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다. (가)~(라)의 현상이 독립적으로 나타났을 때 갑(甲)국 국민의 생활 모습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제시된 것 외에 다른 경제적 요인에는 변화가 없으며, 모든 거래는 달러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보기>

(가)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지난해의 1/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나) 국내 조류 독감 파동으로 달걀과 달걀 가공품의 수입이 지난해 보다 5배 증가하였다.

(다) 한류의 영향으로 문화 예술 저작권의 해외 판매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라) 국민 총소득의 감소로 해외 상품에 대한 1인당 지출이 감소하였다.

- ① (가), (나)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일시적으로 개선된다.

② (나), (다)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우리 정부의 외채 상환 부담을 증가시킨다.

③ (다), (라)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가격 경쟁력은 낮아진다.

④ (가), (다)는 외환의 공급 측면에, (나)와 (라)는 외환의 수요 측면에 향을 미친다.

[정답] ②
[출제단원] 경제 V.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출제영역] 환율 변동의 효과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가)에서 외국인의 국내 투자 감소는 외환의 공급 감소 요인입니다. 외환 시장에서 공급이 감소하면 환율이 상승합니다.

• (나)에서 상품의 수입 증가는 외환의 수요 증가 요인입니다. 외환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환율이 상승합니다.

• (다)에서 저작권의 수출증가는 외환의 공급 증가요인입니다. 외환 시장에서 공급이 증가하면 환율이 하락합니다.

• (라)에서 해외 상품에 대한 수입 감소는 외환의 수요 감소 요인입니다. 외환 시장에서 수요가 감소하면 환율이 하락합니다.

① (O) (가), (나)는 둘 다 환율 상승 요인입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하락하여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상승하여 수입이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경상수지가 개선됩니다.

② (X) 환율이 상승하면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나)는 환율 상승 요인이지만, (다)는 환율 하락 요인입니다. 주어진 자료에서는 (나)와 (다) 중 어느 쪽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지 나타나있지 않으므로 환율 변동 방향을 알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외채 상환 부담의 증감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③ (O) (다), (라)는 둘 다 환율 하락 요인입니다.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 상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은 낮아지게 됩니다.

④ (O) (가)는 외환의 공급 감소, (다)는 공급 증가를 만들어 냅니다. (나)는 외환의 수요 증가, (라)는 수요 감소를 만들어 냅니다.

10. <보기>에서 국제 관습법으로 가장 옳게 묶인 것은?

<보기>

ㄱ. 신법 우선의 원칙
ㄴ. 외교관 면책 특권
ㄷ.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
ㄹ.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정답] ③
[출제단원] 법과정치 VI. 국제 사회의 법과 정치
[출제영역] 국제 관습법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신법 우선의 원칙(ㄱ)과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ㄹ)은 법의 일반 원칙에 해당합니다. 외교관의 면책 특권(ㄴ)과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ㄷ)은 국제 관습법에 해당합니다.

11. <보기>의 (가)~(다) 제도가 공통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가) 생계 곤란 가구에 최저 생계비 지원
(나) 집행유예 중인 자에게도 선거권 부여
(다)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 : 1까지로 제한

- ①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 ②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다.
- ③ 가장 고전적인 권리로서 방어적 성격의 권리이다.
- ④ 신분, 성별, 재산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이다.

[정답] ④
[출제단원] 법과정치 III. 헌법의 기본 원리
[출제영역] 기본권의 종류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가)는 국민의 ‘평등’한 생존권 보장, (나)는 선거권 귀속에 있어서의 ‘평등’ 실현, (다)는 선거권 가치에 있어서의 ‘평등’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들입니다. 따라서 (가)~(다) 제도가 공통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기본권은 ‘평등권’입니다.

- ① (X)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적 기본권’입니다.
- ② (X)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은 ‘사회적 기본권’입니다. (가)의 경우 사회적 기본권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다)는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보기>의 제도가 공통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기본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 ③ (X) 가장 고전적인 권리이자 방어적 성격의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입니다.
- ④ (O) 신분, 성별, 재산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평등권’입니다.

12.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갑(甲, 20세)은 A사에 계약직으로 취업한 지 1년이 넘었다. 팀장이 바뀌면서 인사 평가 점수가 낮으니 회계 담당이던 갑(甲)에게 영업 업무까지 맡으라고 강요했다. 제안을 거절하면 정직원 전환이 안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억지로 일을 맡게 되었다. 그 후 갑(甲)은 영업 실적이 부족하고 업무 수행이 태만하다는 이유로 문자 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 ① A사의 해고 처분은 사유는 부당하나 절차상 하자는 없다.
- ② 갑(甲)은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판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 ③ A사의 노동조합은 갑(甲)에 대한 부당해고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A사를 제소할 수 있다.
- ④ 갑(甲)이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②

[출제단원] 법과정치 V.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부당해고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① (X) 해고 처분 사유의 정당성 유무는 재판을 통해 따져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문자 메시지에 의한 해고 통보는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 통보를 문서의 형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 문서의 범위에 문자 메시지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② (O)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과 별도로 사용자를 피고로 하여 해고 무효 확인 소송(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룰 수 있습니다.
- ③ (X) 부당해고를 당한 당사자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근로자 갑(甲)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제소 할 수 있는 주체도 노동조합이 아니라 근로자 갑(甲)입니다.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는 것과 구분해야 합니다.
- ④ (X) 부당해고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중앙 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이 됩니다.

13. <보기>의 밑줄 친 ①~④ 중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발표 학생: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법률 개정 절차입니다. 우리나라는 ①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② 발의된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국회의장에게 제출되고, 국회의장이 문제가 있는지 검토 후 법제 사법위원회에서 자구, 체계 등을 심사하도록 합니다. 법제 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③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됩니다.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④ 대통령이 의의서를 붙여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된 법률안은 의의서를 반영하여 수정하고 재상정됩니다.

[정답]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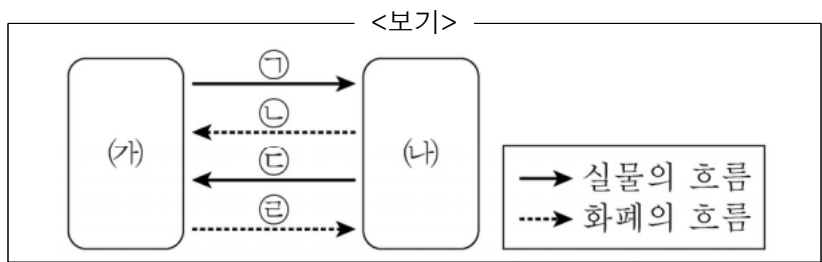
[출제단원] 법과정치 III. 헌법의 기본 원리

[출제영역] 법률 제·개정 절차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① (X) 국회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로 발의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내용입니다.
- ② (X) 발의된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 사법 위원회에서 자구·체계 심사를 거칩니다. 즉, 「상임위원회→국회의장→법제 사법 위원회」가 아니라 「국회의장→상임위원회→법제 사법 위원회」가 올바른 순서입니다.
- ③ (O)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일반 의결 정족수)’으로 의결됩니다.
- ④ (X)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의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는 재의에 붙여 다시 한 번 의결(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하게 될 뿐이며, 대통령의 의의서를 반영하여 수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14. <보기>는 민간 경제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민간 경제 주체에 해당한다.)



- ① (가)가 가게이면, ㉠은 재화이다.
- ② (나)가 기업이면, ㉡은 서비스의 대가이다.
- ③ ㉢이 생산요소이면, (가)는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 ④ ㉣이 생산요소의 대가이면, (나)는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이다.

[정답] ③

[출제단원] 경제 Ⅰ.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의 이해

[출제영역] 민간 경제의 주체와 흐름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민간 경제 주체는 가게와 기업입니다. 따라서 (가)와 (나)는 각각 가게와 기업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 ① (X) (가)가 가게이면 가게가 제공하는 실물인 ㉠은 재화가 아니라 노동, 토지, 자본, 경영과 같은 생산 요소입니다.
- ② (X) (나)가 기업이면 ㉡은 가게(가)가 생산요소를 제공하고 얻는 요소 소득입니다.
- ③ (O) ㉢이 생산요소이면 (가)는 생산요소를 구입하는 기업입니다.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 ④ (X) ㉣이 생산요소의 대가이면, (나)는 생산요소를 제공하는 가게입니다. 가게는 생산물 시장에서 수요자 역할을 합니다.

15. <보기>는 생산측면에서 외부효과가 발생한 A재의 시장 상황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단위 : 개, 원)			
<사회적 최적수준>		<현재 시장 균형>	
사회적 최적 생산량	80	시장 균형 생산량	50
최적 가격	100	시장 균형 가격	㉠

- ① ㉠은 100보다 작다.
- ② 외부 불경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 ③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 ④ 정부가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정답]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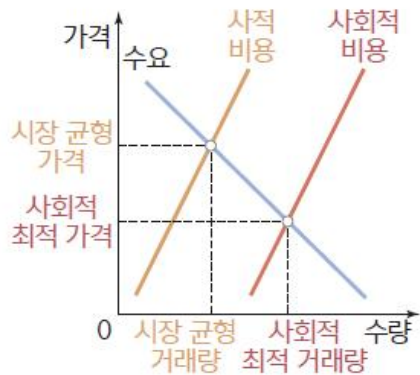
[출제단원] 경제 Ⅲ. 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외부효과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보기>에서 시장 균형 생산량(50개)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80개)에 비해 적습니다. 시장에 공급되는 양이 바람직한 수준에 비해 적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A재 시장에서는 ‘생산에 있어 외부 경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① (X) 생산에 있어 외부 경제가 나타날 경우 시장 균형 가격은 사회적 최적 가격에 비해 높습니다. 따라서 ㉠은 100보다 큼니다.



- ② (X) 생산에 있어 외부 경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③ (X) 생산에 있어 외부 경제가 나타날 경우 사적 비용은 사회적 비용보다 큼니다.
- ④ (O) 정부가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생산자의 생산 비용이 감소합니다. 생산 비용이 감소하면 공급이 증가하여 사회적 최적 수준의 생산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16. <보기>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갑(甲), 을(乙)국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탄력적, 비탄력적 중 하나이다.)

<보기>

A제품에 대한 국가별 시장 조사 결과		
구분	갑(甲)국	을(乙)국
현재 판매량	1,000개	500개
원화로 환산한 현재 가격	1만원	1만원
필수재로 인식하는 소비자의 비율	높다	낮다
가계의 소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작다	크다

- ① A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갑(甲)국에서는 가격을 내리는 전략을 통해 기업의 판매 수입을 극대화할 것이다.
- ② 을(乙)국에서 A제품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보다 크고 1보단 작을 것이다.
- ③ A제품의 가격이 변화할 때 갑(甲)국의 수요량은 을(乙)국의 수요량 보다 덜 민감하게 나타난다.
- ④ A제품은 을(乙)국보다 갑(甲)국에서 대체재가 더 많을 것이다.

[정답] ③
 [출제단원] 경제 III. 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수요의 가격 탄력성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해 필수재로 인식할수록, 상품의 가격이 소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을수록 비탄력적 상품이 됩니다. 따라서 갑(甲)국에서 A제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0 < E_d < 1$), 을(乙)국에서 A제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E_d > 1$)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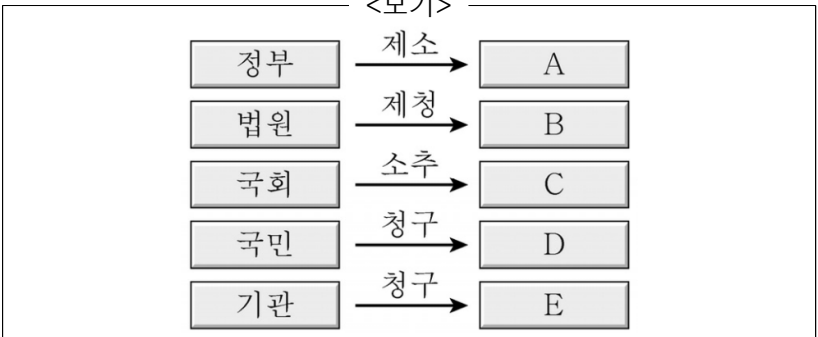
① (X)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경우(甲국) 가격의 변동 방향과 판매수입의 변동 방향이 같습니다. 따라서 가격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올려야 판매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② (X) 을(乙)국에서 A제품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탄력적입니다. 따라서 탄력성은 1보다 크게 나옵니다.

③ (O) 탄력성이란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 변동의 민감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갑(甲)국의 수요량이 탄력적인 을(乙)국의 수요량보다 가격 변화에 덜 민감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④ (X) 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더 탄력적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A제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갑(甲)국보다 탄력적인 을(乙)국에서 A제품의 대체재가 더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7. <보기>의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D의 경우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 있다.
- ② C의 결정의 효력은 당사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
- ③ A, B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헌법 재판관 6명 이상의 출석과 5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④ E에 해당하는 것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이다.

[정답] ①
 [출제단원] 법과정치 III. 헌법의 기본 원리
 [출제영역] 헌법재판소의 권한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헌법 재판의 종류 중 정부가 제소하는 A는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법원이 제청하는 B는 위헌 법률 심판, 국회가 소추하는 C는 탄핵 심판, 국민이 청구하는 D는 헌법 소원,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 단체가 청구하는 E는 권한 쟁의 심판입니다.

① (O) 헌법 소원(D)은 일반적 의미의 헌법 소원인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과,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 재판 당사자가 직접 헌법 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 있습니다.

② (X) 헌법 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피소추자는 공직으로부터 파면됩니다. 파면된 자는 탄핵 결정 선고가 있는 날부터 5년간 공직을 담당할 수 없지만, 탄핵의 원인이었던 사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③ (X) 위헌 정당 해산 심판(A)에서 해산 결정, 위헌 법률 심판(B)에서 위헌 결정을 위해서는 헌법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며, 종국심리에 참여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④ (X) E는 권한 쟁의 심판입니다.

18. <보기>는 갑(甲)국의 경상수지 자료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국제 거래는 갑국과 을국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제시된 자료 이외의 거래는 없다.)

<보기>

(단위 : 억 달러)		
	2017년	2018년
상품수지	30	20
서비스수지	-20	-30
본원소득수지	-15	10
이전소득수지	10	-5

- ① 2018년 갑(甲)국의 상품 수출액은 2017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 ② 2018년 경상수지는 을(乙)국 화폐 대비 갑(甲)국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요인이다.
- ③ 2017년과 달리 2018년 갑(甲)국의 경상수지는 외환 보유액이 증가하는 요인이다.
- ④ 2018년 경상수지는 갑(甲)국에서는 물가 하락을, 을(乙)국에서는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

[정답] ④

[출제단원] 경제 V. 세계시장과 한국 경제

[출제영역] 국제수지표 이해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① (X) <보기>에서 상품 수지의 흑자폭은 2017년 30억 달러에서 2018년 20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흑자폭이 감소했다고 상품 수출액이 감소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상품 수출액은 100억 달러, 상품 수입액은 70억 달러였다면 상품수지는 30억 달러 흑자입니다. 2018년에 상품 수출액은 120억 달러이고, 상품 수입액이 100억 달러이면 상품 수지는 20억 달러 흑자입니다.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가면서 상품 수지는 30억 달러 흑자에서 20억 달러 흑자로 감소했지만 상품 수출액은 10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 ② (X) 갑(甲)국의 2018년 경상수지는 5억 달러 적자입니다. 갑(甲)국에서 외화의 순유출이 이뤄졌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갑(甲)국의 환율은 상승합니다. 환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갑(甲)국의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을(乙)국은 5억 달러 흑자를 본 것이기 때문에 을(乙)국에서 외화의 순유입이 이뤄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을(乙)국의 환율은 하락합니다. 환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을(乙)국의 화폐 가치가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2018년 경상수지는 을(乙)국 화폐대비 갑(甲)국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요인입니다.
- ③ (X) 2017년 갑(甲)국의 경상수지는 5억 달러 흑자이고, 2018년 갑(甲)국의 경상수지는 5억 달러 적자입니다. 따라서 2017년과 달리 2018년 갑(甲)국의 경상수지는 외환 보유액이 감소하는 요인입니다.
- ④ (O) 2018년에 갑(甲)국에서는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갑(甲)국 통화량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통화량이 감소하면 화폐의 가치는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물가는 하락합니다. 2018년 을(乙)국에서는 경상수지 흑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을(乙)국 통화량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물가는 상승합니다.

19. <보기 1>의 밑줄 친 ㉠, ㉡ 기관이 추진할 정책에 대한 내용을 가장 옳게 추론한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정부가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소비가 더디게 회복되고 고용 증가세도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 정부와 ㉡ 중앙은행은 여러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보기 2>

ㄱ. ㉠은 세율을 인하하여 가계의 처분가능 소득을 감소시킬 것이다.

ㄴ. ㉡은 채권시장에서 국·공채를 매입할 것이다.

ㄷ. ㉠과 ㉡은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ㄹ. ㉠은 통화 정책, ㉡은 재정 정책으로 경기 안정화에 나설 것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정답] ③

[출제단원] 경제 IV. 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경기 안정화 정책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보기1>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경기가 침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과 중앙은행(㉡)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 ㄱ. (X) 경기가 침체했을 때 정부(㉠)은 경기 부양을 위해 세율을 인하합니다. 세율을 인하하면 가계의 처분가능 소득이 증가하여 소비가 증진되어 경기 부양 효과가 발생합니다.
- ㄴ. (O) 경기가 침체했을 때 중앙은행(㉡)은 국·공채를 매입하여 통화량을 증가시킵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하락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여 경기 부양 효과가 발생합니다.
- ㄷ. (O)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정부(㉠)은 확장 재정 정책, 중앙은행(㉡)은 확장통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로 인해 총수요가 증가하면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 되어 경기가 부양됩니다.
- ㄹ. (X) 정부(㉠)은 세율을 조절하는 재정 정책,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조절하는 통화(금융)정책으로 경기 안정화를 시도합니다.

20. <보기>에 해당하는 경제적 유인과 성격이 가장 유사한 것은?

<보기>

19세기 영국에서는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들을 호주로 유배를 보내는 것이 관례였는데, 호송 도중 죄수들이 사망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했다. 영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 범죄자의 수에 비례하여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이송이 끝났을 때까지 살아 남은 죄수들의 수에 비례하여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이후 호송 도중 죄수들이 사망하는 문제는 크게 줄어들었다.

- ① 특허권
- ② 환경 오염세
- ③ 쓰레기 종량제
- ④ 전력 요금 누진제

[정답] ①
[출제단원] 경제 III. 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경제적 유인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경제적 유인이란 처벌 가능성이나 보상과 같이 사람이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경제적인 요인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유인은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 유인과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부정적 유인으로 나뉩니다. 제시문에서 영국 정부는 이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죄수들을 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긍정적 유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① (O) 특허권은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사람이 일정한 기간 동안 독점적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술 발명을 유도하기 위한 긍정적 유인의 사례입니다.
- ② (X) 환경 오염세는 오염 물질 배출량에 비례해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오염 물질 배출 감소를 유도하는 부정적 유인의 사례입니다.
- ③ (X)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배출량에 비례해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쓰레기 배출 감소를 유도하는 부정적 유인의 사례입니다.
- ④ (X) 전력 요금 누진제는 전력 사용이 증가할수록 요금을 누진 적용하여 과도한 전력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부정적 유인의 사례입니다.